

저출산, 해결 가능하다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2010년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의 마지막 해이자, 제2차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중요한 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5년간의 1차 계획은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구변화 대응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하였다는 점에서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과제들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기 이전에 매우 의미있는 발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10년의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예산은 12조 3,840원이 투입되었다. 저출산 관련 사업에 5조 8,595억원, 고령화 관련 사업에 5조 780억원, 성장동력 확보에 1조 4,395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이는 2006년 동 예산의 총액이 2조 1,445억원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팔목할만한 변화이다. 따라서 예산 총액 하나만 보더라도, 정부와 국민의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관심을 축발하였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동 기간 동안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눈에 띄는 성과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몇 년을 끌어오던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삑감되고 기초노령연금제가 도입되는 등 국민연금 개혁 작업이 마무리되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가 도입되어 치매 혹은 중풍으로 고통 받는 사람과 가족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러나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비 지원을 대폭적으로 강화하는 등 포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 2006년 1.12명, 2007년 1.25명으로 점진적인 회복의 기미를 보이는 듯하다가 2008년 1.19명으로 다시 감소하면서 2009년에는 1.15명까지 하락하였다.

이제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은 드러나고 있다. 출산을 막는 가장 큰 장애는 부모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기는 육아비와 교육비로 지목되고 있고, 취업여성의 경우에는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질 좋은 탁아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경제·사회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긴 교육기간과 취업준비기간 등으로 인한 만혼화 경향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육지원 대상 확대 및 수준 제고, 보육시설 확충 등 관련 예산의 대폭적인 확대를 통한 방안이 우선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 반면 일·가정 양립 환경조성과 만혼화 방지 등은 적합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에 물리적인 한계를 보인다. 전자의 경우도 선진국 수준으로 예산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2010년 현재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저출산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의 확산이다. 어지간히 예산을 투입해도 정책효과가 명확하지 않으니 보육관련 예산지출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국내 저출산 문제 해결보다는 외국 이민 수용 등을 통한 우회적인 방법이 더 비용효과적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다문화 시대에 한민족 순혈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난센스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저출산의 근본원인이 ‘아이 낳기에는 너무 힘든 경제·사회적 환경’이기 때문에, 비용측면에서 외국인을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은 너무 안이한 시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끼리도 함께 하기 어려운 세상이 더욱 복잡해지고, 이에 따른 사회통합 비용은 더욱 더 커질 우려가 존재한다. 또한 저출산 현상이 진행되는 한 인구구조 고령화도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통제될 수 없기 때문에 저출산을 막는 비용보다 고령화에 따른 비용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산아제한은 정부와 개인의 선호방향이 동일하였기 때문에 정책효과를 쉽게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출신장려는 각 개인의 이익이 사회이익과 역방향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예산지출과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총체적으로 진행되어야만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 딱 5년만 해보고 그만 두기에는 우리 국가와 민족의 미래는 너무나 소중하다.